

제1과목 : 노동법1

1.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 ②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4조(휴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④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시 근로자수가 45명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9명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60일전까지 해고의 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⑤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4. 근로기준법령상 임신부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 ④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⑤ 사용자는 임신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5.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각 사업상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해당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6.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제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① $\neg: 2, \sqcup: 3, \sqcap: 3, \text{e}: 6$ ② $\neg: 3, \sqcup: 2, \sqcap: 3, \text{e}: 3$
 ③ $\neg: 2, \sqcup: 3, \sqcap: 6, \text{e}: 6$ ④ $\neg: 3, \sqcup: 2, \sqcap: 6, \text{e}: 6$
 ⑤ $\neg: 3, \sqcup: 3, \sqcap: 6, \text{e}: 3$

7.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적용될 수 없다.
- ②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 ③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8.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 ②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 ③ 근로감독관은 기숙사에 임검(臨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 ⑤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9.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②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 ③ 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0.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2년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상한액은?

- ① 500만원 ② 1,000만원 ③ 2,000만원 ④ 4,000만원 ⑤ 8,000만원

11.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도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2.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 ①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② 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③ 실내장식의 디자인 업무
④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⑤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

13.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그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14. 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②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15.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 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ㄷ.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 ㄹ.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제111호)
- ㅁ.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 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17.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 ②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 ②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 ⑤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분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20.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 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②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 ④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가 57세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3.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②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 ⑤ 재해보상금은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③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 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성별·연령·학력·자격 기타 직업능력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과 목 : 노 동 법 2

26. 헌법재판소의 노동3권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노동3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 ④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 ⑤ 헌법이 노동3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결권 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근로자란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 ③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주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 ④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 ⑤ 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③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 업무가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라면 그 활동에 따른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단체협약에 노조전임규정이 있더라도 그 내용상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 ⑤ 노동조합이 전임운용권을 갖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노동조합은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을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소속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지원 또는 지도할 수 없다.
- 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규약에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관청은 접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②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려·보완사유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④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규약의 제정·변경	ㄴ. 임원의 선거·해임
ㄷ. 대의원의 선출	ㄹ.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실시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neg, \perp, \sqsubset
④ $\perp, \sqsubset, \sqsupset$ ⑤ $\neg, \perp, \sqsubset, \sqsupset$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소위 인준투표제는 위법하다.
- ②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 ③ 쟁의행위 중이더라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 ⑤ 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 ②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④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 대표자 ② 단위노동조합 ③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 ④ 사업주 개인 ⑤ 사용자단체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인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
- ②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 ③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동일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체협약만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④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⑤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 사용자가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인사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사처분은 무효이다.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단체협약에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이다.
- ④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남아 있게 된다.
- ⑤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다.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달리 헌법적 보장규정이 없다.
- ⑤ 정당한 직장점거 후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③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④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 ⑤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을 결정할 경우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41.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
- ③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④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조합원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게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들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위 제3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추천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 ③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④ 사적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적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 ④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⑤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4.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한다.
- ②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③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된다.
- ④ 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상(私法上)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 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사 간의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45.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을 한 경우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사용자가 연설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불이익취급에 대한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은 없다.
-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주의 이외에 처벌주의를 병용하는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다.
-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구제명령은 재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 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47.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 ②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노동위원회는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②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③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 ④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⑤ 근로자의 고충처리

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4.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丙은 甲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 丙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丙은 甲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甲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⑤ 만일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丁의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55.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甲이 탄 비행기가 2008년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그 후 법원에 의하여 乙이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2008년 4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② 乙이 건물의 관리 및 개량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甲이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乙이 건물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甲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유효하다.
- ⑤ 만약 甲의 실종선고로 인해 건물을 상속한 선의의 丙이 그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丙은 甲에 대해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6.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②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 ③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 ④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한 약정
- ⑤ 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5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 ③ 어떤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 ④ 사기로 인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58.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乙이 甲을 위한 매매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乙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ㄴ. 乙은 甲의 수권행위가 없더라도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ㄷ.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ㄹ. 乙의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甲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neg ② \neg, \exists ③ \neg, \forall
④ \neg, \forall, \exists ⑤ $\neg, \neg, \forall, \exists$

59. 乙이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丙으로부터 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쌍방의 허락을 받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의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경우
- ④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미성년자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⑤ 무권대리인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丙에게 추구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60. 조건 있는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불능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③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④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⑤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61.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 ②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 ③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 ④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 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의 성취

62.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의 유효한 압류
- ② 정지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의 성취
-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채무승인
- ④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 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

63.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 ② 채무인수가 있으면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해제권은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이다.
- ④ 전(前)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이다.

64.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③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 ④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재판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6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행위이거나 물권행위를 불문한다.
- ④ 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때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6.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②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은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③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67.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②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③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도 채권자는 시효완성 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 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8.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것만으로는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③ 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④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69.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 ②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③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 ④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 이외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③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이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 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사용이익과는 별도로 감가비(減價費) 상당액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71.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소비대차는 효력이 있다.
- ②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이 차용액으로 된다.
- ④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차용한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72.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 ②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③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④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⑤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73.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위임은 종료한다.
-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에서 생긴 과실은 수임인에게 귀속한다.
- ④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⑤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74. 甲과 乙이 공동작업 중에 그들의 과실로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 사이에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 경우 甲과 乙이 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 ② 甲이 자기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丙에게 배상한 경우에도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丙이 甲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나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④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乙에 대한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⑤ 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乙을 대위하여 상계할 수 있다.

75.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데 지나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 ③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면책된다.
- ④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제 4과 목 : 사 회 보 험 법

76.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노동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대리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⑤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7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7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②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④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0.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직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②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30일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하이어야 한다.
- 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81.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이주비	ㄴ. 훈련연장급여	ㄷ. 육아휴직 급여
ㄹ. 조기재취업 수당	ㅁ. 직업능력개발 수당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82. 장애인 근로자인 甲(40세)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여 이직하였다. 甲의 피보험기간이 5년이라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몇 일인가?

- ① 120일 ② 150일 ③ 180일 ④ 210일 ⑤ 240일

83.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②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③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84. 甲(50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0만원이었다. 甲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

- ① 80만원 ② 160만원 ③ 200만원
④ 320만원 ⑤ 받을 수 없다.

85.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는?

- 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② 가사서비스업에 종사 중인 자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출입국관리법령상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②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채권추심원
③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④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87.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에 도달한 이후에는 ()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 ① 소비자물가변동률, 60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② 소비자물가변동률, 61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③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0세, 소비자물가변동률
④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1세, 소비자물가변동률
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5세, 소비자물가변동률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 ⑤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된다.
-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 ④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없다.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회사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
- ② 빌딩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
- ③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가)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은 (나)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다)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① 가: 60일, 나: 5일, 다: 60일 ② 가: 60일, 나: 7일, 다: 90일
 ③ 가: 90일, 나: 5일, 다: 60일 ④ 가: 90일, 나: 5일, 다: 90일
 ⑤ 가: 90일, 나: 7일, 다: 90일

92.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반환일시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노령연금 ⑤ 상병연금

93. 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연 (가)만원
 2. (나)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연 (다)만원
 3. (라)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연 (다)만원

- ① 가: 20, 나: 20, 다: 15, 라: 55 ② 가: 20, 나: 18, 다: 10, 라: 60
 ③ 가: 15, 나: 18, 다: 10, 라: 60 ④ 가: 15, 나: 19, 다: 5, 라: 60
 ⑤ 가: 10, 나: 19, 다: 5, 라: 65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자는?

-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④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95.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⑤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한다.
- ② 월별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 ③ 보험료율이 인하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개산보험료를 감액 조정한다.
- ④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 ⑤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의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 ③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 ④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 ⑤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결손처분 사유가 된다.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 ②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원수급인이라 한다.
- ③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한다.
- ④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보험료등에 대한 고지·수납·채납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본다.
- ②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
- ④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채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다.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 ①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② 보험료 채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채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공을 거부한 경우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경우, 관계인이 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제5과목 : 경제학원론

101.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기존의 필름산업이 쇠퇴하여 필름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발생하는 실업은?

- ① 마찰적 실업 ② 구조적 실업 ③ 계절적 실업
- ④ 경기적 실업 ⑤ 만성적 실업

102. 유량(flow) 변수가 아닌 것은?

- ① 반도체에 대한 수요량 ② 쌀의 공급량 ③ 국내총생산(GDP)
- ④ 핸드폰 수출량 ⑤ 통화량

103. 아이스크림 수요곡선의 이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아이스크림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였다.
- ② 대체재인 냉동요구르트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 ③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 ④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다.
- ⑤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조만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104.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 ①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 ② 여가가 정상재이고,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 ③ 여가가 열등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 ④ 여가가 열등재이고,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 ⑤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기 때문이다.

105. 케인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시장에서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갖는다.
- ② 투자는 기업가의 심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
- ③ 경기침체 시에는 확대재정정책이 필요하다.
- ④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하므로 만성적인 수요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⑤ 저축의 역설이라는 관점에서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라고 주장한다.

106.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한다.
- ㄴ.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사회적비용은 사적비용보다 작다.
- ㄷ.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피구세(Pigouvian tax)라고 한다.
- ㄹ.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107. 다음의 생산함수 중 단기에 ‘수확체감’과, 장기에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의 특성을 갖는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이다.)

- ① $Q=LK$ ② $Q=L^{1.8}K^{1.8}$ ③ $Q=\sqrt{LK}$ ④ $Q=L^{0.2}K^{0.2}$ ⑤ $Q=L^{0.8}K^{0.8}$

108. A는 직장 근무를 시작한 1985년에 연봉 2,000만원을 받았고, 임원으로 승진한 2010년에는 연봉 1억원을 받았다. 1985년의 물가지수가 50이고, 2010년의 물가지수가 125라면 2010년 물가로 환산한 A의 1985년 연봉은?

- ① 2,500만원 ② 4,000만원 ③ 5,000만원
④ 1억원 ⑤ 1억 2,500만원

109. 환율(원/미국달러 환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미국달러화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함을 의미한다.
- ② 장기에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미국의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경우 환율은 올라간다.
- ③ 환율이 내려가면 국내 대미 수출기업들의 수출은 증가한다.
- ④ 환율이 내려가면 미국에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학비 송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 ⑤ 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면 환율은 내려간다.

110.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의 평균총비용곡선 및 평균가변비용곡선은 U자형이며, 현재 생산량은 50이다. 이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300, 평균총비용은 400, 평균가변비용은 200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시장가격은 300으로 주어져 있다.)

- ㄱ.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총비용곡선 및 평균가변비용곡선은 우하향한다.
 ㄴ.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총비용곡선은 우하향하고 평균가변비용곡선은 우상향한다.
 ㄷ. 개별기업은 현재 양의 이윤을 얻고 있다.
 ㄹ. 개별기업은 현재 음의 이윤을 얻고 있다.
 ㅁ. 개별기업은 단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

-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ㄹ, ㅁ

111. 어느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단위당 100으로 책정하였으며, 이 가격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이다. 이때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은?

- ① 25 ② 50 ③ 100 ④ 150 ⑤ 200

112.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에 관한 케인즈경제학자와 통화주의자의 견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케인즈경제학자는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② 케인즈경제학자는 통화정책의 외부시차가 길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통화주의자는 $k\%$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주장한다.
 ④ 케인즈경제학자에 따르면 이자율이 매우 낮을 때 화폐시장에 유동성함정이 존재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재정정책에 대해서 통화주의자가 예상하는 구축효과는 케인즈경제학자가 예상하는 구축효과보다 크다.

113. A국의 구리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은 $Q=12-2P$ 이고, 국내 공급곡선은 $Q=P$ 이다. 구리의 국제 시장가격이 5라면, A국 구리 생산업체들의 국내판매량과 수출량은? (단, Q 는 수량, P 는 가격을 나타내고, 이 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가정한다.)

- ① 국내판매량: 2, 수출량: 3 ② 국내판매량: 3, 수출량: 2
 ③ 국내판매량: 3, 수출량: 3 ④ 국내판매량: 4, 수출량: 0
 ⑤ 국내판매량: 4, 수출량: 1

114. 과거 몇 년간 자동차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음 중 가능한 원인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자동차의 수요는 변하지 않고 공급이 감소하였다.
- ② 자동차의 수요는 변하지 않고 공급이 증가하였다.
- ③ 자동차의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가 감소하였다.
- ④ 자동차의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가 증가하였다.
- ⑤ 자동차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였다.

115. 생산물시장에서 독점인 A기업은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자이다. 이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이 $w = 50 + 10L$ 이고, 노동자의 추가 고용으로 얻는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은 $MRP_L = 200 - 5L$ 일 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단, w 는 임금, L 은 고용량이다.)

- ① 90 ② 100 ③ 110 ④ 120 ⑤ 130

116. 효율임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낮은 임금수준은 역선택을 발생시킨다.
- ②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설명한다.
- ③ 실업의 존재를 설명한다.
- ④ 임금수준이 높으면 근로자들의 태만이 증가한다.
- ⑤ 임금수준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117. 본원통화 및 통화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본원통화가 증가할수록 통화량은 증가한다.
- ㄴ. 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통화승수는 증가한다.
- ㄷ.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합한 것이다.
- ㄹ.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대출을 하는 경우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8. 물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솔로우(R. Solow)모형에서 수렴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 ① 자본의 한계생산체감 ②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③ 내생적 기술진보
- ④ 기업가 정신 ⑤ 인적자본

119.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노동비용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작아진다.
- ②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기 쉬울수록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작아진다.
- ③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량은 명목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 ④ 노동에 대한 수요독점이 있을 경우, 완전경쟁에 비해 균형임금이 높고 균형고용량은 적다.
- ⑤ 1차 노동시장은 2차 노동시장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고용되는 시장이다.

120. 실업 및 우리나라의 실업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일 때 실업률은 0이다.
- ② 경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 ③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수치이다.
- ④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의사가 있는 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 ⑤ 실업률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121.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급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더라도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 ② 1급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할 경우 소비자잉여는 0이 된다.
- ③ 3급가격차별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이 설정된다.
- ④ 3급가격차별의 경우 한 시장에서는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되고, 다른 시장에서는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낮게 된다.
- ⑤ 3급가격차별의 경우 한 시장에서는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하고, 다른 시장에서는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낮게 설정한다.

122. 파레토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 ②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일반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 ③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평등한 소득분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 ④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 하에서는 항상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 ⑤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123.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이 조달된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 ③ 경기침체 시에는 조세 대신 국채 발행을 통한 확대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 ④ 소비이론 중 절대소득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 ⑤ 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이 이론의 설명력이 더 커진다.

124.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 되는 이유는 장기에는 화폐환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 ② 필립스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 ③ 스테그플레이션은 필립스곡선이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④ 새고전학파에 따르면 예상된 정부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필립스곡선이 단기에서도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 된다.
- ⑤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할 때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필립스곡선은 하방으로 이동한다.

125. B국의 총생산함수는 $Y = AL^\alpha K^{1-\alpha}$ 이다. B국의 경제성장률이 10%, 노동증가율이 10%, 자본증가율이 5%,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3%일 때 노동소득분배율은? (단, Y는 총생산,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 K는 자본, α 는 0과 1 사이의 상수이다.)

- ① 0.3 ② 0.4 ③ 0.5 ④ 0.6 ⑤ 0.8